

KMI 동향분석

VOL.154

2019 NOVEMBER

발간년월 2019년 11월(통권 제154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박수진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위원
(forest21@kmi.re.kr/051-797-4731)
최석문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leedsud@kmi.re.kr/051-797-4738)
김찬웅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cwkim@kmi.re.kr/051-797-4744)
김대경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연구원
(kimdaekyung@kmi.re.kr/051-797-4710)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Marine Protected Areas, MPAs)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과 해양에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역’으로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해양관리정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법률에 근거를 둔 3,392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 중 연안과 해양에 지정된 보호지역은 612개, 면적은 9,326.1km²(중복면적 포함)로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2.10%에 달한다. 반면, 육상에서는 보호지역으로 19,939.7km²(중복면적 포함), 15.6% 정도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 이외에 환경부, 문화재청 등 다른 부처에서 지정하는 보호구역 또는 국립공원 등을 포함하면, 중복 지정된 면적이 1,466.2km²에 달한다. 또한 「해양생태계법」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금지행위나 허가행위가 상이하고, 위반에 따른 벌칙도 달라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리과정에 ‘지역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보호구역 및 연안습지보호지역 담당자의 전문성과 인력도 부족하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국은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이 발달해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 협의회’를 구축·운영하는 등 거버넌스 마련이 시급하다.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보호지역별 관리정책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되 해운·수산·자원개발 등 다양한 해양이용 활동과 보전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체계는 지역주도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브랜드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끝으로 2020년 생물다양성협약 쿤밍 당사국총회 등 국내외 동향과 여건에 맞추어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의 정책적 가치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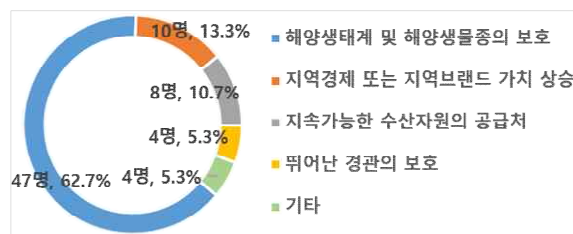
■ 보호지역,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s)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과 해양에 지정되거나 또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지역’으로서 “국정과제 84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임
- 국제사회는 2010년에 일본에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목표(Aichi Biodiversity Strategic Goals)’ 중 11번 목표로 세계 연안과 해양의 1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연안과 해양에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관할해역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음¹⁾

■ 2019 해양보호구역 설문조사에서 해양 보전가치 적극 공감

- 2019년 6월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의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²⁾, 해양보호구역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종의 보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생태계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증가시키나, 수산자원에 대한 과도한 이용은 해양생태계를 악화시켜 미래자원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

그림 1.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의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1) 해양수산부(2019),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기본계획(2019~2028) 참조

2) 「보호지역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설문조사」는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중인 「보호지역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전남 무안군에서 개최된 제12회 해양보호구역대회(2019.09.05.-06.) 참가자로 구성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100명 중 77명이 응답

■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의 현황 :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 등 지정주체 다양

-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육상과 해역에 3,392개의 보호지역(Protected Areas, PA)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연안과 해양에 지정된 보호지역의 면적은 9,326.1km²로 전체 해양의 2.10%에 달함. 반면에 육상은 19,939.7km², 15.6% 정도가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³⁾⁴⁾
-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환경부도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상·해안공원 및 특정도서 등을 해양공간에 지정·관리하고 있음
 - 문화재청도 명승,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도 시·도 연안 습지보호지역,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지정·관리하고 있음

표 1.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현황

보호지역의 유형	전체면적(km ²)	육상 면적(km ²)	해양면적(km ²)	전체 개소(개)
해양보호구역	• 355.799	-	• 355.799	• 15
연안 습지보호지역	• 1,421.65	-	• 1,421.65	• 13
람사르 습지	• 1,351	-	• 1,351	• 7
사도 연안 습지보호지역	• 6.2		• 6.2	• 1
환경보전해역	• 1,882.10	• 982.6	• 899.5	• 4
수산자원보호구역	• 3210.6	• 713	• 2,497.60	• 30
천연기념물	• 1,189.60	• 229.1	• 960.4	• 371
천연보호구역	• 456.3	• 431.7	• 24.6	• 11
명승	• 218.2	• 201.1	• 17.1	• 109
국립공원	• 6,796.30	• 4,028.60	• 2,767.60	• 22
도립공원	• 1,038.30	• 733.6	• 304.7	• 29
군립공원	• 238.3	• 235.4	• 2.9	• 27
합계	• 18,164.35	• 7,555.10	• 10,609.05	• 612

자료: 바다생태정보나라(http://www.ecosea.go.kr/mpa_intro/mpa/mpa01.do)와 한국보호지역통합DB관리시스템(<http://www.kdpa.kr/>)의 자료를 근거로 저자 작성 (검색일자 : 2019.10.20.)

3) 여기서는 「해양생태계법」상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보호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반면에 “보호지역”은 근거법률과 소관부처는 상이할 수 있으나, 해양과 육상의 생태계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규제하는 것을 의미

4) 보호지역 통합DB관리시스템, <http://www.kdpa.kr/> (검색일자 : 2019.10.20.)

그림 2. 우리나라 육상 및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현황



자료: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시스템, <http://www.kdpa.kr/> (검색일자 : 2019.10.20.)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28개 보호지역 지정·관리

- 해양수산부는 습지보호지역 1,421.65km², 해양생태계보호구역 259.332km², 해양생물보호구역 91.237km², 해양경관보호구역 5.23km² 등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이 우수한 해역 총 1,777.449km²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⁵⁾
- 습지보호지역 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
-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서 전체 국토면적의 2.47%에 달할 정도이며,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주요한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갯벌생태계조사, 해양생태관광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복원을 위해 '19.1월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정·관리의 문제점

■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른 다양한 보호지역의 분산 지정·관리

-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크게 8개가 있고, 소관 부처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이 있음

5) 2018년 12월 현재 기준, 해양수산부(2019),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집행결과(17~18) 보고서」 참조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라 지정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인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상·해안공원을 해양공간에 지정·관리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표 2.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과 부처별 소관법률 비교

부처	법률	관련 보호지역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 해양보호구역
	· 습지보전법	· 연안습지보호지역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관리구역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보전해역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 갯벌관리구역
환경부	· 자연공원법	· 해상·해안국립공원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구역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수산자원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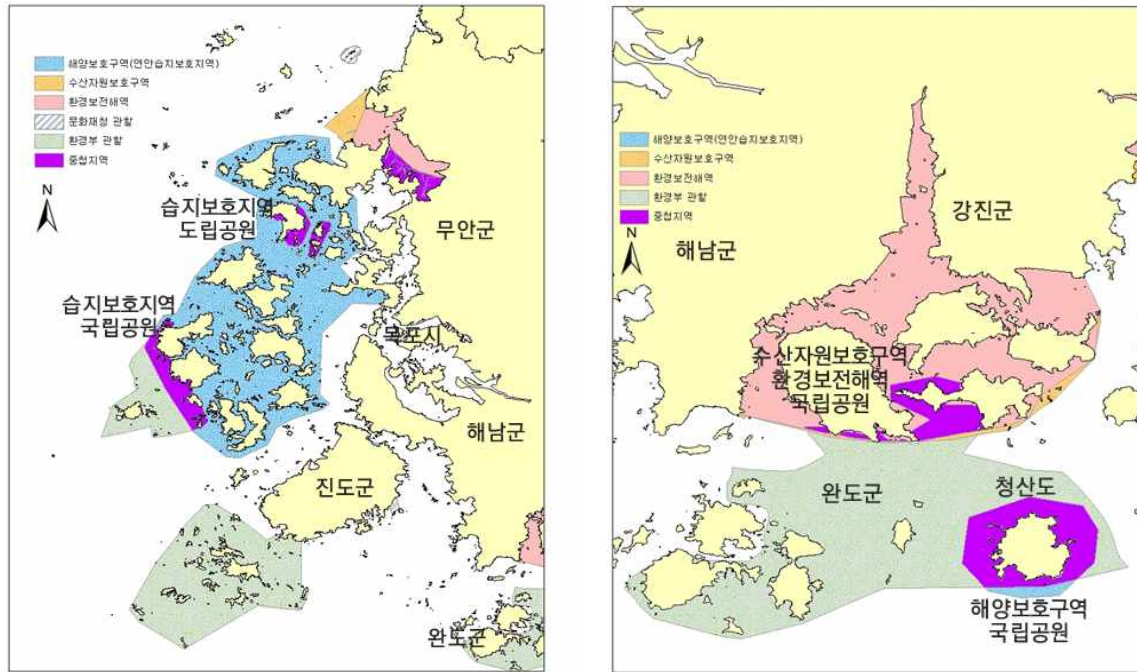
자료 : <http://www.law.go.kr/> (검색일자 : 2019.10.28.)

■ 산발적·중복적 지정·관리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한계

- 연안과 해양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보호구역 이외에 환경부, 문화재청 등 다른 부처에서 지정하는 보호구역 또는 국립공원이 산발적으로 존재하여 중복 지정된 면적이 1,466.2km²에 달함⁶⁾
- 이와 같이 연안·해양공간에 존재하는 다수의 중복된 보호지역은 해양수산부가 실효적인 해양생태계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문화재청이 각각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정책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일관성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함

6)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시스템, <http://www.kdpa.kr/> (검색일자 : 2019.10.20.)

그림 3. (좌) 서해안의 보호지역 중복지정 현황, (우) 남해안의 보호지역 중복지정 현황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규제와 처벌 등에서 정합성 저하로 인한 혼란 야기 우려

- 보호지역의 대표적인 규제 수단인 행위제한의 경우 법률에 따라 금지행위, 허가행위 내용이 다르고, 이에 대한 벌칙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하한 금액에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해양생태계보호구역과 해상·해안국립공원이 모두 지정된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양생태계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제62조 제4호)을, 「자연공원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제82조 제1호)을 부과하고 있음⁷⁾
- 요컨대, 일반국민은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과 관련된 법률들의 규제 차이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임에도 형벌이 달라져 규범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지역특성·수요를 반영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의 어려움

-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관리사업의 시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지역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다만, 세부 관리사업의 추진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7) <http://www.law.go.kr/> (검색일자 : 2019.10.28.)

- 해양보호구역별 관리기본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이며 매년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2019년 관리사업 예산이 29.5억 원에 불과하여 28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에 대해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선택적·집중적 관리사업 추진에 제한 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에는 방문자센터가 대부분 설립되어 있어 다양한 관리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경우는 오륙도 해양보호구역 등 일부에만 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교육·홍보,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관리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음

■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선 필요

-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사업은 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리/운영, 연구/조사, 수익/주민, 교육/홍보, 시설/공사의 5개 분야로 크게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음⁸⁾
-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역에서 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매뉴얼이 충분하지 않음⁹⁾
- 이로 인해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과 이행점검, 연차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인식 제고활동 확대 필요

- 지역차원에서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의 지정목적과 관리사업, 행위제한, 예상되는 정책 효과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하여 고창군, 서천군 등에서는 지역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양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62.3%(총77명 중 48명)의 응답자들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을, 문제점 개선에 대해 67.5%(총77명 중 52명)의 응답자들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강화’라고 응답하여, 인식제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음
 -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부족은 관리사업의 투입예산 부족, 관리사업의 다양성 부족, 교육·홍보 부족, 정책결정과정의 피드백 미흡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보호지역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중심에서 초·중·고등학생 등 학생과 주변 연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8)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2015년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 2015.12, p.5

9) <http://www.law.go.kr/> (검색일자 : 2019.10.28.)

해외 주요국의 해양보호지역 관리 사례

■ 미국, 국립해양보호구역 센터에서 보호구역의 통합적인 관리 추진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상무부와 내무부로 구분하여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정·관리 목적 및 주체에 따라 국립, 주립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음
- 2000년부터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국립해양보호구역 센터(National MPA Center)”를 설치하여 해양보호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 미국 정부는 이 「대통령령 13158(Executive Order 13158)」에 따라 해양대기청과 내부무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한편, 2009년 해양보호구역 국가관리체계(National System of MPAs)를 수립하고 있음¹⁰⁾
-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에는 정부관계자 이외에 전문가, 환경단체, 어업인, 낚시동호인, 지역주민, 관광업계 및 해양산업 분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예방·조정하는 역할 수행

■ EU, 보호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의 일관성과 관리 효과성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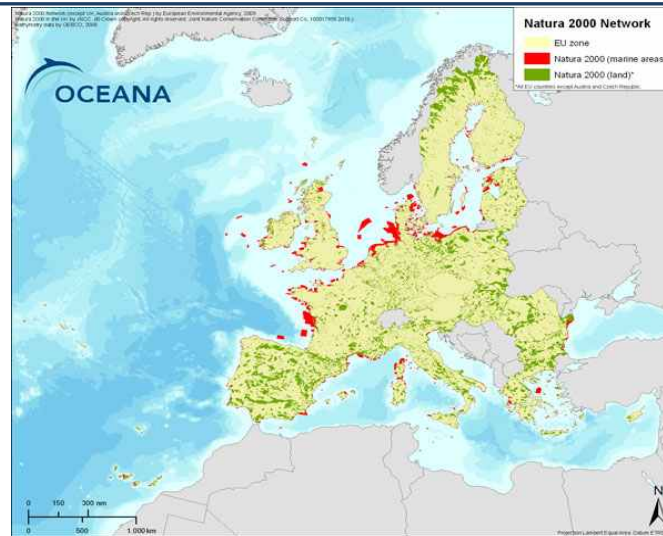
- EU는 1979년 「조류 지침(Birds Directive)」 및 1992년 「서식지 지침(Habitats Directive)」에 따라 ‘나투라 2000(Natura 2000)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럽 생태보호구역(육상과 해상을 모두 포함) 관리의 일관성을 증진하고 있음¹¹⁾
- 현재 유럽의 해역 가운데 약 5.9%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가 ‘Natura 2000 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이며, 1.9%는 개별 회원국이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에 해당함¹²⁾

10) 육근형 외, 「해상에 설정된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비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12, pp.72~74.

11) 유럽공동체 홈페이지, https://ec.europa.eu/environment/nature/natura2000/index_en.htm (검색일자 : 2019.07.29.)

12) EEA Report No. 3/2015.

그림 4. EU의 Natura 2000 보호구역 현황



자료: Oceana EU 홈페이지, <https://eu.oceana.org/en/eu/media-reports/features/the-natura-2000-network> (검색일자 : 2019.10.2.)

- 특히 EU는 「해양전략기본법(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MSFD)」에 따른 ‘공간보호제도(spatial protection measures)’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의 일관성 및 대표성을 증진하고 해양 레저 산업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음¹³⁾

■ 호주, 권역별 관리계획 수립과 공원청을 통한 해양공원 통합관리

- 호주는 과거 연방정부가 연방해양보호구역(Commonwealth marine reserves)을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최근 “해양공원(Marine Parks)”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호주 공원청(Parks Australia)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음
- 2019년 7월 기준으로 공원청에서 58개의 해양공원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6개의 권역별 관리계획에 따라 각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 6개의 권역에는 5개의 해양공원 네트워크(the North, North-west, South-west, South-east, Temperate East networks)와 1개의 산호해(Coral Sea)가 있음
 - 다만 대보초 해양공원, 허드맥도널제도 해양공원은 대보초해양공원관리청, 남극연구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¹⁴⁾

13) EC, 'Programmes of measures and exceptions under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 Recommendations for implementation and reporting. 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MSFD): Common Implementation Strategy', Marine Directors, Meeting of 25 November 2014, Rome, Italy.

14) <https://parksaustralia.gov.au/marine/parks/> (검색일자 : 2019.10.28.)

그림 5. 호주 North-west Network의 해양공원 관리 현황

Column 1 Marine park name	Column 2 IUCN category	Column 3 Zone name and IUCN category					
		Special Purpose Zone (Trawl) (VI)	Multiple Use Zone (VI)	Habitat Protection Zone (IV)	Recreational Use Zone (IV)	National Park Zone (II)	Sanctuary Zone (Ia)
Shark Bay	VI		✓				
Carnarvon Canyon	IV			✓			
Ningaloo	IV				✓	✓	
Gascoyne	IV		✓	✓		✓	
Montebello	VI		✓				
Dampier	VI		✓	✓		✓	
Eighty Mile Beach	VI		✓				
Roebuck	VI		✓				
Mermaid Reef	II					✓	
Argo-Rowley Terrace	VI	✓	✓			✓	
Kimberley	VI		✓	✓		✓	
Ashmore Reef	Ia				✓		✓
Cartier Island	Ia						✓

자료: Australian Marine Parks, 「North-west Marine Parks Network Management Plan 2018」, 2018, p.40

자료: Australian Marine Parks, 「North-west Marine Parks Network Management Plan 2018」, 2018, p.40

- 한편, 호주 공원청은 토지소유자, 이용자, 다른 정부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양공원을 관리하고 있음
- 공원청은 Australian Fisheries Management Authority,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Defence, Geosciences Australia,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연방 정부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함
- 해양공원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원주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참여를 유도함¹⁵⁾

해양에 지정된 보호지역의 관리체계 개선방향

■ 정책개선 1 : “보전과 이용”의 균형 관리정책 마련

-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의 지정·관리방식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정보 체계를 기초로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정책목표와 특성을 고려하되, 해운·수산·자원개발 등 다양한 해양이용 활동과 보전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갈등관리도 관리정책의 필수 고려사항으로 포함해야 할 것임
- 또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 훼손된 서식지의 복원, 국민의 안전 확보, 해양생태관광의 활성화 등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공간의 이용이 조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함

15) Australian Marine Parks, 「North-west Marine Parks Network Management Plan 2018」, 2018, p.12

■ 정책개선 2 :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및 역량 강화

-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은 부처별로 다양하게 지정·관리되고 있으므로,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해양보호구역 관리정책 협의회’를 구축·운영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함
-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 후 관리사업(조사·관찰, 주민인식 제고 등)의 연계
- 한편,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은 2001년에 무안갯벌이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 총 28개소로 확대되었으나, 순환보직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 해양보호구역 권역발전센터”를 통해 교육·정책 지원 등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¹⁶⁾

■ 정책개선 3 : 지역주도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착

-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지역주도형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지역별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지역별 해양보호구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이 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제시된 의견과의 정책반영을 피드백하는 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해양보호구역 정보플랫폼” 구축
-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고령 어업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정책 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한 기회 확대 필요¹⁷⁾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지역주민이 해양보호구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수단을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함

■ 정책개선 4 : 해양보호구역의 브랜드화 및 경쟁력 제고

- 해양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도형 관리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과 연계된 ‘해양보호구역의 브랜드화 전략’이 필요함
- 즉, 지역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관한 자료를 정보화하고, 투명한 이행 평가를 통해 제2의 순천만 갯벌과 같은 ‘우수 보호구역사례 발굴’을 통해 예산을 확충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http://www.ecosea.go.kr/mpa_domcondi/mpa/coni/mpa02.do (검색일자 : 2019.10.28.)

17) 정지호·최희정·최석문, 「시민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2018, p.113

- 2019년 4분기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노력 중임
- 한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므로 물범 회유경로, 잘피 서식지 등 보호구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중점조사 내용을 개선하고 조사정점, 조사주기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정책개선 5 : 보호지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해양에 설정된 보호지역은 다양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함
- 2020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할 예정임
 - GBF에서는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효과적인 보존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음¹⁸⁾
- 이에 2019년에 수립된 “제2차 해양생태계보존·관리 기본계획”의 16대 중점추진 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에 쿤밍 당사국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2028년까지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책목표와 세부 이행수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장기전략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되,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에 설정한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연계·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

18) CBD/POST2020/PREP/1/1,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 Discussion Paper, 2019.1.1.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이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환갑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 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병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사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테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파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6.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물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초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다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URL: <https://www.kmi.re.kr/>